

리투아니아의 언어 정책: 러시아어의 배제와 축출을 향해서

정경택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국제지역연구원 해외지역센터

I. 서론

리투아니아는 소련 해체 바로 전인 1991년 9월 6일 독립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더불어 발트 3국 중의 하나로 국토 면적은 65,300km², 인구는 2016년 현재 2,854,235명이며 이 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은 국가이다.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지역 3국은 모두 소련 혁명의 혼란기를 틈타 1918년 독립을 선언하고 2차 대전 발발 전까지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1940년 들어 모두 소련에 점령당했다가 독일군의 침공과 소련군의 반격, 점령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수많은 인명 손실을 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말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소련 전체의 혼란기에 다른 발트 두 나라와 더불어 독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1989년 1월 26일 리투아니아 연방 공화국 최고 회의 간부회의 ‘리투아니아 국어 사용 명령’과 동년 2월 20일 리투아니아 내각의 ‘리투아니아 국어 사용 지원 조치 규정’을 제정하여 리투아니아어를 국어로 규정하면서 민족 정체성의 상징인 리투아니아어의 지위를 격상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1940년 소련의 강제 병합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위 ‘인간 띠 잇기 운동’을 벌여 소련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¹⁾

리투아니아는 이렇게 소련 해체 이전부터 리투아니아어를 공식어로 정한 위와 같은 조치와 규정 수립을 시작으로 독립하여 부활한 뒤 「헌법」, 「국어법」, 「교육법」, 「국적법」을 제정하여 소련 점령기의 유산과 잔재를 일소하여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려 노력해 오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와는 달리 소련 시기에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이주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 두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토착 주도 민족(Titular Nation)²⁾과 러시아어 사용자들 간의 민족 갈등과 언어 분규는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폴란드와 연합 국가 형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소수 민족으로서는 가장 수가 많은 폴란드인들과의 민족, 언어 갈등이 일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리투아니아는 현재 다른 발트 두 나라와 비교하여 토착 주도 민족인 리투아니아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만 러시아 연방을 비롯한 소련의 여타 신생 독립국들처럼 10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³⁾

이러한 소련의 각 연방 공화국은 모두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 간 의사소통

1) ‘발트의 길(리투아니아어: Baltijos kelias, 에스토니아어: Balti kett, 라트비아어: Baltijas ceļš)’이라고 고도 하는데, 1989년 8월 23일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국민 약 200만 명이 만든 600km의 인간 사슬로, 1939년 8월 23일에 체결된 소-독 불가침 조약으로 발트 3국이 소련에 편입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열린 반소 시위였다. 정경택, 라트비아의 언어 정책과 민족 간 갈등 연구, 《슬라브어 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 한국 슬라브어 학회, 2012, 237.

2) 러시아어의 ‘titul'naja nacija’는 ‘명목 민족’이라고 번역되지만 소련의 15개 연방 공화국의 국호가 되는 토착 민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착 주도 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라는 국명으로 대표되는 민족이 각각 리투아니아 민족, 우즈베크 민족, 벨라루스 민족으로 이들을 토착 주도 민족으로 부르는 것이다.

3) 2001년 현재 1만 명이 넘는 소수 민족은 폴란드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과 우크라이나인이다. Ethnic composition of Lithuania 2001, <http://pop-stat.mashke.org/lithuania-ethnic2001.htm/> (검색일: 2014. 2. 2)

언어가 러시아어였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 시기에도 토착 주도 민족인 리투아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모어가 리투아니아 민족의 민족적, 문화적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민족의 정신문화와 떨어질 수 없고 민족 정체성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국가와 개인, 모든 공공 활동의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는데, 이는 독립 이후에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 제국에 강제 합병된 이후 소련 시기, 독립 이후 현재까지 리투아니아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 특히 법률 제정과 같은 언어 관련 정책과 이로 인한 러시아어의 지위 하락, 축소, 더 나아가 배제 등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소고는 앞선 연구인 리투아니아의 언어 관련 법과 러시아어의 상황⁴⁾ 및 발트 3국의 언어 정책⁵⁾을 수정하여 기술한 것이다.

II. 본론

1. 소련 해체 전 러시아인들의 유입과 러시아어

리투아니아는 1253년 민다우가스(Mindaugas)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최초의 통일 국가를 수립했다. 이후 리투아니아 대공국을 창건하여 흑해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13~14세기에 리투아니아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이후 1386년 요가일라(Jogaila)가 폴란드와 연합 국가(연방)를 형성하였고, 1410년 이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군이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의

4) 정경택, 리투아니아의 언어 관련 법과 러시아어의 상황, 《슬라브 研究》 제30권 제2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119~142.

5) 정경택, 발트 3국의 언어 정책, 《슬라브 研究》 제30권, 제4호(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4), 183~218.

튜턴 기사단을 무찌름으로써 독일인들의 동방 팽창을 저지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이 리투아니아-폴란드 연방은 폴란드가 분할되고 1795년 리투아니아 지역이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병합되었는데, 이미 17세기에 러시아의 구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 최초로 리투아니아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 러시아 제국으로의 병합과 더불어 러시아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왔지만, 1940년 소련의 연방 공화국이 되기 전까지 러시아인들의 수는 다른 발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1918년 독립 리투아니아 국가의 창설이 선언되어 리투아니아의 민족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어의 공간은 심각하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양 세계 대전 사이에 리투아니아에서 러시아어로 교육하는 중등학교는 1개교뿐이었고 러시아 주민들도 5만 명(전 인구의 5%)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941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발트 지역 대부분이 독일군에 점령되었지만 1944년 독일이 패퇴하면서 소련군이 다시 리투아니아를 점령했다. 이때 리투아니아인들은 독일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당했다. 3만여 세대가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당하고 12만여 명이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북유럽, 미국 등지로 망명해야 했다. 이를 대신하여 러시아인들을 비롯한 많은 수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소련의 다른 공화국들에서 이주 유입하여 러시아어 사용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화국 지배층으로서 러시아어의 특권적 지위까지도 이용해 왔다.

소련의 해체가 시작되는 1989년 당시 리투아니아에서의 러시아인의 비율은 10% 이하였지만 라트비아의 경우는 34%, 에스토니아는 30%에 달했다. 특히 라트비아에서도 라트비아인은 겨우 절반을 넘는 52%밖에 되지 않아 지금도 라트비아는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용자들, 러시아어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러시아 연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라트비아 정부의 극단적인 토착 주도 민족 우대 정책으로 인한 민족 간 분규의 우려를 낳고 있다.⁶⁾

소련 시기 리투아니아에 이주민의 유입이 적은 원인은 첫째, 러시아 제국과 양 세계 대전 사이의 독립 시기에 이미 공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발전하여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경우처럼 소련 전역으로부터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없었다는 점, 둘째, 이들 두 국가들과는 달리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제국으로의 병합 시기가 100년 이상이 늦어 러시아어의 영향과 러시아인들의 유입 기간이 보다 짧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차 대전 후 다시 리투아니아가 소련의 연방 공화국이 된 이후 러시아어는 공식적으로는 소련의 국어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전 연방 차원의 유일한 공식어이자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로서 리투아니아에서도 그 지위가 확고해졌다. 즉 러시아어 학습은 리투아니아의 모든 교육 기관에서 강제화되었고 러시아어 신문을 비롯한 리투아니아의 지역적, 변연방 차원의 러시아어로 된 정기 간행물들이 대규모로 출간되었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 매체, 그리고 영화가 러시아어와 소비에트 문화를 확장했으며 러시아어로 기술된 서적의 발행 및 판매가 널리 확대되어 러시아어는 사회 활동과 직업 전문 활동의 모든 분야, 그중에서도 항해, 항공, 기술 공학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리투아니아어로 된 전문 용어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부 리투아니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러시아어로 교육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또한 빌뉴스 대학교와 빌뉴스 교육대학, 샤울라이 교육대학에는 인문학자, 러시아어문학 교사를 양성하는 러시아학부가 있었고 그 외의 교육대학에서도 러시아어 학교 교사들을 양성했는데, 이들의 수는 1980년대 말까지 거의 100개까지 증가하여 그 학생수는 85,000명에 달했다.⁷⁾

6) 정경택, 앞서 언급한 글, 237~256. 정경택, 에스토니아의 언어 정책의 영향 연구, 《슬라브어 연구》, 제18권, 제2호(서울: 한국 슬라브어 학회, 2013), 167~184.

7) Русский язык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Литвы, <http://regnum.ru/news/1439981.html#ixzz2XrwApxuo/> (검색일: 2013. 10. 5.)의 재인용.

2. 소련 해체 이후의 언어 상황

공산주의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발트 3국은 정치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재주장하고 나섰고 실제로 그 권리를 부활시켰는데, 이는 정치적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언어적 소수였던 토착 주도 민족을 언어적 다수로 역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즉 신생 독립 발트 3국은 소련 당시 소련의 여타 공화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이주민(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어 사용자)과 토착 주도 민족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소련 시기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민족 분포, 즉 높은 비율의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존재가 재독립한 발트 3국의 통치 엘리트들과 토착 주민들의 큰 불만을 낳았고,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리투아니아도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러시아어의 특권적 상황을 축소, 조정하여 러시아어를 단순히 외국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의 사용 영역을 축소하고 있지만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 이후부터 소련의 해체 전까지 리투아니아인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분포의 안정적인 상황에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즉 다음의 표를 보면 소련의 해체 당시와 독립 10여 년 후, 그리고 최근까지 발트 3국의 토착 주도 민족과 러시아인의 비율을 보면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하여 러시아인의 수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 발트 3국의 시기별 토착 주도 민족과 러시아인 분포(%)

	1989년		독립 10여 년 후		최근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인	79.3	리투아니아인	83.4	리투아니아인
	러시아인	9.4	러시아인	6.3	러시아인	5.8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인	61.5	에스토니아인	67.9	에스토니아인	68.9
	러시아인	30.3	러시아인	25.6	러시아인	25.4
라트비아	라트비아인	52.0	라트비아인	58.3	라트비아인	62.1
	러시아인	34.0	러시아인	29.1	러시아인	26.9

3. 언어 관련 법률

독립 이후 제정된 리투아니아의 언어 관련 법률은 다른 두 발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국어법」, 「국적법」, 「교육법」, 「공공 정보법」이 있는데, 「소수 민족법」의 존재가 독특하다. 다음은 「헌법」을 비롯한 각 법률의 언어 관련 내용이다.

(1) 「헌법」

리투아니아의 「헌법」은 1992년 10월 25일 국민 투표로 제정되어 근본적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14장 154조로 구성되어 있다⁸⁾. 「헌법」은 다음에 다룰 「국어법」과 「국적법」, 「소수 민족법」 여러 조항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여기서 언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리투아니아 민족은 리투아니아 고유의 정신, 모어, 표기 체계, 관습을 보전해 왔다.

8) 「КОНСТИТУЦИЯ」, <http://www.krugosvet.ru/node/36183?page=0,7#part-14>(검색일: 2013. 10. 5.)

- 14조. 국어는 리투아니아어이다.
- 29조. 성, 인종, 민족, 언어, 출신, 사회적 지위, 신앙,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른 인권의 제한과 특권의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37조. 소수 민족 출신 국민은 자신의 언어, 문화, 관습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 117조. 공화국 내에서 재판은 국어로 진행된다. 리투아니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역사를 통해 심리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리투아니아 「헌법」의 언어 관련 조항들은 단순한데, 리투아니아어가 국어임을 명시하고 있고 사법 절차의 언어가 리투아니아어라고 규정한 조항 외에는 소수 민족의 언어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어의 언급이 없음은 소련 통치 시기를 불법 점령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연한데, 다른 발트 국가들의 「헌법」은 리투아니아 「헌법」의 조항과 유사한 조항 외에 보다 명세화된 조항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즉 라트비아 「헌법」에서는 의회 의원 당선자의 선서에서 국어를 수호할 의무를 서약하고 의회 활동과, 지방 자치 단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청원 및 답변 언어가 모두 국어임을 밝히고 있고⁹⁾, 에스토니아 「헌법」은 라트비아 「헌법」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더 나아가 교육 수단의 언어가 에스토니아어임을 밝히고 있음이 특징이다.¹⁰⁾

(2) 「국어법」

1995년 1월 31일 채택된 「국어법」¹¹⁾은 독립 이전의 국어 사용 명령과 규정을 대체한 것으로 전체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9) 정경택, 앞서 언급한 글, 247.

10) 정경택, 앞서 언급한 글, 176.

11)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http://www.old.eurasia-media.ru/law/lit_o_yaz.shtml
(검색일: 2013. 10. 5.)

1조에서 주민 간의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나, 종교 공동체와 소수 민족 언어는 통제하지 않지만, 2조에서 리투아니아의 국어는 리투아니아어임을 천명하면서 법률, 공공 업무, 사법, 공공 활동, 교육, 문화 부문, 지명과 인명의 표기에서의 국어 사용과 정부의 국어 수호, 의무, 통제 등을 규정하여 사적 영역 이외의 모든 부문에서의 국어 사용을 정하고 있다.

즉 리투아니아어를 국가의 유일한 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확립하려는 국가 정책이 이 「국어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어가 예전의 지위를 대부분 상실하고 공식적인 의사소통 수단에서 배제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국어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수 민족 언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러시아어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수 민족어 목록을 제시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2001년 「국어법」 시행의 감독을 주 임무로 하는 ‘리투아니아어 국가 위원회(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이하 국어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어의 통제 방향을 정하고 표준화와 법제화 문제의 결정, 사전, 교과서 등의 가장 중요한 표준어 작업 평가와 승인 등을 다루게 되었다.¹²⁾

「국어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리투아니아어의 실제적인 국어 지위를 확정하는 「국어법」의 실행을 위한 법¹³⁾이 바로 뒤를 이었고 ‘국어의 사용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국어 지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3) 「국적법」

1989년 11월 3일 리투아니아 최고 소비에트가 「국적법」을 제정하여 1940년 리투아니아가 소련에 강제 병합되었을 당시 국민이나 이들의 자손들이 자동

12)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 p_id=157640(검색일: 2013. 10. 7.)

적으로 새로운 공화국의 국민이 될 수 있었고, 고정 수입을 가진 모든 영주민들에게도 국적을 부여했다.¹³⁾

즉 15조 리투아니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국적 취득 조건을 보면 '1) 리투아니아어를 알고…… 4) 공화국 「헌법」의 기본적인 조항을 알 수 있으면 누구나 국적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국적 취득에 특별한 요건을 정하지 않아 당시 영주민은 출신 민족, 거주 기간 또는 국어의 지식과 상관없이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수 민족의 90% 이상을 포함한 대다수 주민들이 독립 이후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엄격해진 「국적법」이 1991년 12월 5일 채택되었는데¹⁴⁾, 이 개정 「국적법」의 18조에 따르면 국적을 취득하려면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영주권을 보유하고 합법적 수입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어 시험과 「헌법」 기본을 묻는 시험을 통과하고 국가 충성을 서약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즉 12조 리투아니아공화국 국적 부여 조건을 보면 리투아니아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즉 리투아니아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공화국 「헌법」의 기본적인 조항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¹⁵⁾

그러나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간의 조약에 따라 1989년 10월 3일과 1991년

13)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ССР」, <http://scipio.fatal.ru/lithuania.html/> (검색일: 2013. 10. 7.)

14) 1989년의 「국적법」은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의 「국적법」은 46조로 구성되어 있고 훨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ССР」, <http://eurostart.info/index.php/info/zakonilitvi/102-ogragdanstve/>(검색일: 2013. 10. 8.)

15) 「국적법」은 1996년에도 개정되었는데, 리투아니아 「헌법」 및 언어 시험 절차는 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효과적인 국어 습득과 시험이 1992년 의회가 정한 '국어 습득 범주 증명'과 2003년의 '국어 습득 범주 증명의 재성명과 시행'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또한 1993년에는 정부가 국적을 취득에 필요한 가장 낮은 증명 범주 결정을 통과시켰다. Laima Kalėdienė, *Evaluation of language policy in Lithuania*, ESUKA-JEFUL 2-2, 2011, 36.

6월 26일 사이에 이주해 온 약 4만 명의 소련 국적자들이 언어 시험과 10년 거주 필수 조건을 면제받아 현재 리투아니아 주민 중 90% 이상이 국적을 취득했다.¹⁶⁾

(4) 「교육법」

1991년 6월 25일 제정된 「교육법」은 40조로 구성되어 있다.¹⁷⁾ 10조에서 교육 언어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학교의 교육 언어는 리투아니아어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는 각 학급에서 모어로 교육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학부모가 교육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소수 민족을 위해 특별 학급이나 일요 학교를 개설한다.

리투아니아어로 교육하는 학교를 제외한 소수 민족 학교에서 리투아니아어 문학을 리투아니아어로 교육한다.

모든 중등학교는 교육과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리투아니아어로 교육한다.

리투아니아어로 교육받을 기회를 리투아니아 전국에서 보장한다.

그 외 26조에서는 중등학교의 교육 언어는 리투아니아어 외에 학부모의 선택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1년의 「교육법」은 리투아니아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용인하고 있고 소수 민족 학생들의 모어 교육을 위한 학급이나 비정규 학교의 설치와 중등학교에서의 교육 언어의 선택을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층위의 학교에서 리투아니아어 문학의 교육은 반드시 리투아니아어로서만 교육

16) Ole Norgaard, *The Baltic States after Independence*, Nortampton, 1996, 187.

17) 「Закон О Образовании」, <http://www.bibl.u-szeged.hu/oseas/litlaw.html> (검색일: 2013. 10. 8.)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비교적 유연한 1991년의 「교육법」은 2006년 6월 13일에 개정¹⁸⁾되었는데, 이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이전의 「교육법」보다는 교육 언어로서의 국어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있다. 즉 28조 6항에서 모든 행정 단위가 모든 정규, 비정규 학교 학생들 모두 국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기술하는 등, 국어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4월 30일 제정된 「고등 교육법」¹⁹⁾의 49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 언어는 국어인 리투아니아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공공 정보법」

2000년 8월 29일 제정된 「공공 정보법」²⁰⁾에서도 국어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34조 「공공 정보 생산 및 유포 언어 규정」에서 공공 정보는 국어, 또는 「국어법」의 규정과 의회 산하 리투아니아어 국가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어, 그리고 그 외의 언어로 창작, 유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어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그 외의 언어는 언어법과 의회 산하 위원회를 거쳐야 가능할 뿐이라는 것으로 의례적이고 명목상의 기술이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외국어로 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반드시 리투아니아어로 더빙되거나 자막을 통해 송출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수 민족어로 된 프로그

18) 「THE LAW ON EDUCATION」, http://planipolis.iiep.unesco.org/upload/Lithuania_Law_amending_Law-on-education_2011.pdf/(검색일: 2013. 9. 14.)

19) 「THE LAW ON HIGH EDUCATION」,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p_id=366717&p_query=&p_tr2=/(검색일: 2013. 9. 4.)

20) 「LAW ON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http://workspace.unpan.org/sites/internet/Documents/UNPAN039762.pdf>/(검색일: 2013. 9. 4.)

램의 방송 및 증계 시간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의도는 국가가 국어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게끔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6) 「소수 민족법」

리투아니아는 다른 발트 두 나라에는 없는 「소수 민족법」²¹⁾을 독립 이전인 1989년 11월 23일 채택했는데, 모두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국가가 다음과 같은 소수 민족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언어, 교육, 결사, 공공 정보, 종교 공동체, 정당과 정치 조직, 아동의 권리 보장 기반과 여타 법률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언어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1조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존중하고, 언어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며, 2조에서는 학교 교육과 신문, 출판, 정보, 신앙에서의 소수 민족어 사용을 보장하고, 4조에서 소수 민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 기관에서의 소수 민족어 사용을 보장하고, 5조에서 이들 지역에서의 공공 표기의 국어와 소수 민족어를 병기하는 것이 언어 관련 조항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법」에서 담고 있는 행정과 교육에서의 소수 민족어 사용 규정은 불명확하여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소수 민족이 밀집하여(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기술의 산술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여러 소수 민족들이 비슷한 비율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러시아어가 자동적으로 특권적인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어는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소련의 신생 공화국들 대부분 지역에서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의 역할을 여전히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의 이러한 특권적인 기능 회복은 리투아니아의 이 「소수 민족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1) 「LAW ON ETHNIC MINORITIES」, http://www.minelres.lv/NationalLegislation/Lithuania/Lithuania_inorities_English.htm(검색일: 2013. 9. 4.)

(7) 그 외의 법

1994년 제정되어 2007년 개정된 「소비자 보호법」 5조의 상품 및 서비스 규정에도 국어 관련 내용이 나온다.²²⁾

- 1조.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국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모두 국어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2003년 12월 제정된 「용어 은행법」²³⁾에 따라 용어 은행이 설치되었는데, 이의 목표는 특히 입법과 관련하여 리투아니아어로 된 표준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여러 다른 정부 기관들에 맞는 통일된 정보 시스템을 기획하고 관련 단체와 개인이 여기에 정보 접근을 쉽게 하는 데 있다. 즉 이런 용어 은행의 설치는 러시아어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리투아니아어로 대체시키기 위한 것이다.

4. 현재의 언어 상황

지금까지 「헌법」과 「국어법」을 비롯한 리투아니아의 언어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았지만 어느 법의 어느 조항에도 러시아어를 비롯한 구체적인 소수 민족어들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어를 비롯한 소수 민족어들의 법적 인 규정과 지위 부여가 리투아니아의 실제 소수 민족 언어와 문화, 전통의 보전 및 발전 지원 정책에 부합한다.

22) 「LAW ON CONSUMER PROTECTION」,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p_id=306060(검색일: 2013. 9. 17.)

23) 「LAW ON TERM BANK」,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p_id=248131&p_query=&p_tr2=(검색일: 2013. 9. 17.)

또한 「헌법」과 「소수 민족법」에서는 리투아니아 민족과 언어를 제외한 소수 민족과 그 언어와 문화를 보전, 발전하도록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어법」, 「교육법」, 「공공 정보법」, 「국적법」 등에서는 국어의 지위 향상, 기능 확대, 국어 교육의 의무화, 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주민의 국적 취득 불가 등을 명시하여 동일한 법 내에서나 다른 법의 조항들과 충돌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서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의 상황은 다른 발트 두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독립 당시의 「국적법」에 따라 러시아인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이 국적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보았듯이 「국적법」의 개정으로 국적 취득 요건이 엄격해지고 「교육법」의 개정으로 러시아어 교육 학교를 비롯한 소수 민족 학교 모두에서 국어의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의 수도 줄고 러시아어의 사용 영역도 축소되고 있다.²⁴⁾ 또한 2013년부터는 러시아어 학교를 비롯한 소수 민족 학교 출신 학생들도 리투아니아어 학교 출신 학생들과 똑같이 국어로만 된 졸업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 학부모들이 자녀를 교육 언어가 리투아니아어인 학교에 보내는 것은 현재의 추세인 셈이다.

또한 러시아어 사용 대중 매체도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신문의 발행이 줄고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러시아어로 된 뉴스 보도가 급격히 줄었고 오직 민영 라디오 방송에서만 러시아어 방송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24) 2001, 2002학년도에 러시아어 교육 학교가 62개교, 러시아어-리투아니아어, 러시아어-폴란드어, 러시아어-폴란드어-리투아니아어 학교가 61개교였고 이들 학교에서 3만 7,500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이는 바로 전인 2000, 2001학년도에 비해 학생수가 3,700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또한 개정된 「교육법」에 의한 학교 개혁과 학교 교육 기관망의 재구성 결과로 2002, 2003학년도에 러시아어 학교의 수는 2개가 줄어 59개교가 되었다. 리투아니아어로 교육하는 과목의 증가로 러시아어 문학 교육 시간이 줄었고 교과서도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1999년부터 러시아어는 중등학교 졸업 국가시험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었다. МІІД,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검색일: 2013. 9. 11.)

2003년 5월 의회가 ‘2003~2008년 국어 정책 지침(2003/2008 State Language Policy Guidelines)’을 제정하여 국어위원회로 하여금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리투아니아어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적인 언어 내적 발전을 조정하는 것이었다.²⁵⁾

이 지침은 특히 영어로부터의 차용어 증가를 우려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실상은 러시아어식 어휘의 배제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

2000년에는 ‘차용어 대체 계획(Program for the Replacement of Loan Words by their Lithuanian Equivalents 2001~2010)’을 정부가 발표하여 러시아어 차용어 대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러시아어는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 수는 적지만 다른 소련 독립국들처럼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즉 러시아어는 전 인구의 60%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이고 젊은 층에서도 영어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외국어이다.²⁶⁾

5. 러시아어 배제

현재 리투아니아에서 러시아어는 국어 지위를 가진 리투아니아어와 비교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하고 소수 민족어의 하나로 전락했는데, 이의 언어 기능 유지나 보전, 쇠퇴 여부는 위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 범주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25) U.S. English Foundation Research, Legislation: Legislation dealing with the use of languages, <http://www.usefoundation.org/view/373>(검색일: 2013. 9. 11.)

26) 2001년 인구 조사 당시 20세 이상은 80%, 15~19세는 62%, 15세 이하의 13%가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МИИД,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검색일: 2013. 9. 11.)

- 1) 국가 구성원의 민족 및 언어 분포 구조
- 2) 국어와 두 언어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언어학적, 이념적 요인
- 3) 교육 및 고용 정책과 기회
- 4)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지향

먼저 국가의 민족, 언어 분포 구조 범주에서 보면, 리투아니아의 러시아어 사용자 수와 비율은 다른 발트 두 나라보다 훨씬 적다. 발트 3국은 러시아 제국 또는 소련에 병합된 기간이 짧고 러시아화(또는 소련화) 역사도 길지 않아 러시아어에 대한 선호도가 극히 낮은데, 리투아니아에는 러시아계와 더불어 폴란드계도 많고 그 외의 민족도 많은 다민족 분포로 인하여 러시아어가 개인 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소수 민족 공동체 간의 의사소통에서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 즉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즉 폴란드계, 벨라루스계, 우크라이나계를 포함한 다양한 소수 민족 출신들은 러시아어를 사실상의 모어로 간주하고 사용하여 러시아어의 보전과 전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는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언어학적, 이념적 요인의 범주이다. 언어학적으로 리투아니아어와 러시아어는 고대로부터 인접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어휘적, 문법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한때는 인도-유럽어족의 ‘발트-슬라브어파’라는 하나의 어파로 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리투아니아어는 벨라루스어, 우크라이나어와 같은 동슬라브어가 아니어서 인접성 정도가 멀고 이들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인들이 러시아어를 보는 시각, 즉 러시아어의 발전성, 특권, 도시에서의 우세와 같은 관념이 리투아니아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간의 유형학적 밀접성은 러시아어 보전에 도움을 주지만 러시아어와 리투아니아어 간의 유형학적 간격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어의 학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어 러시아어의 유지와 보전을 쉽지 않게 한다. 또한 러시아어는 불법 점령군의 언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리투아니아인들이 러시아어의 퇴출을 조장하고 러시아어 구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든다.

셋째, 리투아니아에서의 러시아어 교육 및 러시아어를 이용한 고용 기회에 관한 범주이다. 교육과 고용 기회는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러시아어의 보전과 토착 주도 민족과 여타 민족들의 제2 언어나 외국어로서 러시아어의 선택과 학습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소련 해체 전인 1990, 1991학년도에 국내 2,040개 일반 학교(학생 수 50만 1,740명) 중 85개교가 러시아어 교육 학교, 103개교가 러시아어-리투아니아어 이중 언어 학교로서 여기에서 7만 6,038명의 학생들(15.1%)이 러시아어로 교육받을 수 있었지만, 2004, 2005학년도에는 1,598개교(학생 수 54만 4,754명) 중 러시아어 교육 학교가 55개교, 이중 언어 학교가 40개교로 줄었고 학생수도 2만 7,155명(4.9%)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러시아어 교육 학교 수와 학생수는 계속 줄어 2011, 2012학년도에는 34개교, 1만 6,00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어 학교에서는 6학년부터 러시아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현재 전체 학생 수의 약 73%가 러시아어를 선택하여 배우고 있다. 모스크바 시가 리투아니아에서의 러시아어 교육 시스템 지원에 노력하여 1999년부터 리투아니아의 러시아어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모스크바 시장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리투아니아는 발트 두 나라와는 달리 러시아어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리투아니아어 지식과 구사를 요구하지 않아, 러시아어로 된 고등 교육의 접근이 용이하고 고용 기회도 많아 러시아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러시아어 교육 학교에 보내고 있다.

넷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지향점,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의 범주이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처럼 러시아와 밀접한 선린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긴장 관계를 가져 왔고 서방을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즉 리투아니아는 다른 발트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련 시기를 점령기로 보고 러시아어를 점령자의 언어로 간주하여 배제 정책을 취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본토와 직접 접경하지 않고 러시아인 교포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도 없다. 다만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리투아니아 서남부에 있는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지만 1997년 국경 재획정 조약이 체결되어 이 문제도 해결되었다.

또한 리투아니아 경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과 수입의 제1 대상국 역시 러시아로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가장 크다.²⁷⁾

그리고 이 범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전국적, 지역적 매스 미디어 지위인데, 정보 접근과 취득에서 러시아어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는 주민들에 의해 러시아어 구사력의 보전,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현재 『공공 정보법』에서는 러시아어로 된 정보의 생산, 확산, 습득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신문, 잡지의 경우 현재 리투아니아에서는 러시아와 리투아니아의 매스 미디어 정보를 간추려 보도하는 주간 신문인 <옵조르(Obzor)>, <리토프스키 쿠레르(Litovskij kur'er)>와 리투아니아어 신문의 러시아어판인 <레투보스 리타스(Letuvos ritas)>, 주간지 <레스푸블리카(Respublika)>가 발행된다. 또한 <엑스프레스-가제타(Ekspress-gazeta)>라는 정보지도 발행되는데, 이는 주로 지역 텔레비전과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러시아어로 게재한다. 이들 전국 차원의 정기 간행물 외에 러시아인,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밀집한 도시 지역에서 21개의 러시아어 신문이 발행된다. 그러

27) 2012년 리투아니아의 수출 대상국 비중은 러시아 19%, 라트비아 11%, 독일 7.9%, 에스토니아 7.8%, 영국 6.4%, 폴란드 6.1%, 네덜란드 5.9%, 벨라루스 4.5%였고 수입 대상국 비중은 러시아 31.6%, 독일 10%, 폴란드 9.9%, 라트비아 6.2%, 네덜란드 5.6%로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가장 컸다. CIA, Economy, Lithuan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h.html>(검색일: 2014. 1. 1.)

나 이들 신문의 발행 부수는 많지 않고 이들의 배포도 그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에서 클라이페다(Klajpeda) 시와 수도 빌뉴스의 <수가르다스-티브이(Sugardas-TV)>라는 신문의 발행 부수가 비교적 많다.

그렇지만 「공공 정보법」에서 허용하는 러시아어 사용 주민을 위한 독자적인 공영 텔레비전, 라디오 채널은 없다. 그 대신에 공영 텔레비전, 라디오 채널에서는 러시아어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송출된다. 이는 리투아니아 국영 텔레비전의 주간 방송인 <루스카야 울리짜(Russkaja ulica)>와 주간 15분 뉴스 방송, 빌뉴스 텔레비전 방송국의 주간 프로그램 <네델라(Nedelja)>, 그리고 리투아니아 국영 라디오의 제1, 제2 채널 뉴스 방송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리투아니아 독립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언어 상황을 살펴보았다. 「헌법」과 독립 이전에 나왔던 명령과 조치에 기반을 두지만 완전히 다른 「국어법」, 그리고 「소수 민족법」, 그리고 언어 관련 법률들에서는 소수 민족과 이들의 언어에 대한 존중과 무시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인과 러시아어에 대한 기술이나 규정은 하나도 없고 오직 소수 민족이라는 명칭에 포함되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이 있을 뿐이다. 이는 의도적인 무시이기도 하다.

독립 당시 자동으로 취득되었던 국적도 리투아니아어 시험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개정된 「국적법」에 들어가면서 취득이 어려워져 러시아인들의 리투아니아어 구사가 의무화되었고, 학교를 비롯한 사회 활동에서의 국어 사용 강제로 러시아어는 가정 내의 언어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비록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어인 영어의 득세로 러시아어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외국어일 뿐이다.

리투아니아의 언어 관련 법률들의 모순된 규정은 신생 독립국의 혼란스러운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내외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반이 된다.

비록 발트 지역의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에 대한 문제와 토착 주도 민족과 언어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러시아어가 온전히 보전되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인의 수와 비율이 낮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투아니아에서 러시아어의 소수 민족 언어화, 제2 외국어로의 전략, 사용 영역 축소는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명한데, 독립 리투아니아의 국어 부활, 보호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정경택(2012), 라트비아의 언어 정책과 민족 간 갈등 연구, 《슬라브어 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 슬라브어 학회, 237~256.
- _____(2013), 에스토니아의 언어 정책의 영향 연구, 《슬라브어 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 슬라브어 학회, 167~184.
- _____(2014), 리투아니아의 언어 관련 법과 러시아어의 상황, 《슬라브 硏究》 제30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19~142.
- _____(2014), 발트 3국의 언어 정책, 《슬라브 硏究》 제30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83~218.
- Gabrielle Hogan-Brun(2003), Meilute Ramoniene, Emerging Language and Education Policies in Lithuania, *Language Policy* 2, 27~45.
- Laima Kalėdienė(2011), Evaluation of language policy in Lithuania, *ESUKA-JEFUL*, 2-2.
- Uldis Ozolins(2003), The Impact of European Accession upon Language Policy in the Baltic states, *Language Policy* 2, 217~238.
- Фурман, Д., Задорожник, Э.(2004), “Балтийские русские и балтийские культуры”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го зарубежья: Мир Росси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Литвы, <http://regnum.ru/news/1439981.html#ixzz2XnwApxuo/>(검색일: 2013. 10. 5.)
- КОНСТИТУЦИЯ, <http://www.krugosvet.ru/node/36183?page=0,7#part-14/>(검색일: 2013. 10. 5.)
-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http://www.old.eurasia-media.ru/law/lit_o_yaz.shtml/(검색일: 2013. 10. 5.)
- Ethnic composition of Lithuania 2001, <http://pop-stat.mashke.org/lithuania-ethnic2001.htm/>(검색일: 2014. 2. 2.)
- State Commission of the Lithuanian Language,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p_id=157640/(검색일: 2013. 10. 7.)
-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ССР, <http://scipio.fatal.ru/lithuania.html/>(검색일: 2013. 10. 7.)
-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Литовской ССР, <http://eurostart.info/index>.

- php/info/zakonilitvi/102-ogragdanstve/(검색일: 2013. 10. 8.)
 Закон О Образовании, <http://www.bibl.u-szeged.hu/oseas/lithlaw.html/>
 (검색일: 2013. 10. 8.)
- THE LAW ON EDUCATION, http://planipolis.iiep.unesco.org/upload/Lithuania_Law_amending_Law-on-education_2011.pdf/(검색일: 2013. 9. 14.)
- THE LAW ON HIGH EDUCATION,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p_id=366717 &p_query=&p_tr2=(검색일: 2013. 9. 4.)
- LAW ON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http://workspace.unpan.org/sites/internet/Documents/UNPAN039762.pdf/>(검색일: 2013. 9. 4.)
- LAW ON ETHNIC MINORITIES, http://www.minres.lv/NationalLegislation/Lithuania/Lithuania_Minorities_English.htm/(검색일: 2013. 9. 4.)
- LAW ON CONSUMER PROTECTION,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p_id=306060/(검색일: 2013. 9. 17.)
- LAW ON TERM BANK, http://www3.lrs.lt/pls/inter3/dokpaieska.showdoc_e?p_id=248131&p_query=&p_tr2=(검색일: 2013. 9. 17.)
- МИД,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http://dipkurier.narod.ru/glavdip/doklad1.htm/>(검색일: 2013. 9. 11.)
- U.S. English Foundation Research, Legislation: Legislation dealing with the use of languages, <http://www.usefoundation.org/view/373/>
 (검색일: 2013. 9. 11.)
- CIA, Economy, Lithuan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lh.html/>(검색일: 2014. 1. 1.)
- 리투아니아의 모든 법률 사이트, <http://www.lexadin.nl/wlg/legis/nofr/oeur/lxwelit.htm/>(검색일: 2013. 6. 1.~)